

한미 FTA 비준안 통과...전남농업 품목별 피해 예상액

농지은행 매입 자산 늘리고
농지 담보 매월 생활비 지급
농식품부, 한미 FTA 대책 마련

5년내 관세 철폐땐 한우 피해만 年 376억

보리-콩-쇠고기順 생산액 줄어듦 축산업 가장 심각한 타격...뿌리 흔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2일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남 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전남도의 경우 농업과 축산 비중이 큰 만큼 한미 FTA는 전남 농업과 축산업 기반을 뿌리째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가 관세 철폐 단계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10년 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전국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리와 콩, 쇠고기 순으로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한우 농가를 비롯한 축산농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아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 FTA가 양국에서 비준받은 후 발효돼 현재 40%로 되어있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관세가 5년간 8%씩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2006년 기준 전국 한우 생산액의 15.2%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피해액은 367억원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의 돼지

고기·닭고기·우유 등을 포함한 생산 감소액은 모두 648억원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또 40%의 쇠고기 수입관세를 10년 간 4%씩 줄일 경우 전남은 연간 339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전국 축산업의 총생산감소액은 연간 4천328억원, 전남은 556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전남지역 한우농가의 피해는 연간 4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의 축산업 비중은 전국의 15%. 전남 축산업 가운데 품목별 점유율은 한우가 15.2%로 가장 높고 참외 농가도 3만4천800여 가구에 이른다.

한미 FTA에 따른 전남 한우산업에 타격을 주는 농업의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농촌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리와 양파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전남의 전국대비 점유율이 높아 한미 FTA에 따른 생산감소액의 여파가 커 농촌사회의 기반마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보리는 전국의 52.4%, 양파 51%, 마늘 39%, 배 23%, 콩 23.3% 등이다.

이처럼 생산 비중이 큰 농산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미국산 수입량이 증가할 경우 전남지역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리의 경우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면 434억원, 10년 내 철폐될 경우 401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즉시 철폐되면 생산액은 무려 70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피해는 전남 농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농업생산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고, 수입 농산물에 영향을 덜 받는 품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세 소농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면 영농을 포기하거나 농촌을 이탈하는 농가가 생겨나기 때문에 농업 인력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퇴출농민들이 늘고, 도시근로자 양산 불러와 고용구조가 불안해지는 등 농촌에서 발생한 FTA 충격과는 사회구조 전체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의, 의결을 앞두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막고 있다. 가운데는 박진 위원장. /연합뉴스

한미FTA 19개월만에 외통위 통과 野 저지 몸싸움속 與 강행처리

민주·민노 “무효”...6월 본회의 최종처리 전망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9개월여만인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가장 힘든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미FTA는 협상 과정에서부터 정치권의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이 1년 여간의 협상을 마무리짓고 합의문에 공식서명했지만 정치권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같은 해 9월7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FTA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FTA 비준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쇠고기 제철상과 FTA 체결 이후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선(先) FTA 대책, 후(後) 비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FTA 비준안이 소관 상임위원 외통위에 상정된 것도 정부의 비준안 제출 5개월여만인 2008년 2월13일이었다. 당시 외통위원장이 김원웅 전 의원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잠거를 피해 회의를 변경하면서까지 비준안을 상정했지만 역시 여야는 입장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결국 비준안은 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고, 정부는 18대 국회 임기 개시 직후인 지난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재의결해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18대 국회에서도 17대 국회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됐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논리로 처리에 반대했다.

여야간 장외공방만 계속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인 박진 외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18일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물리력을 동원해 비준안 상정 저지에 나섰고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하는 추태가 연출되기도 했다.

외통위 여야 간사들은 비준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중 국회법에 따라 협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결국 22일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앞서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토론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박 위원장이 표결없이 일방적 통가를 선언했다”고 원의 무효를 주장해 논란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호남 광역경제권 지원단 어디에

내달 출범 앞두고 광주·전남·전북도 신경전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로 구성된 '호남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총괄 추진할 지원단이 다음달 중순에 본격 출범한다.

그러나 지원단 소재지를 놓고 광주·전남도, 전북도 간 신경전을 벌이는 등 출범 전부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 5월 중순에 창립총회를 갖는다. 지원단은 선도산업 프로젝트 기획·선정,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을 집행·총괄하게 된다.

지원단은 단장을 비롯해 호남권 선도산업인 '친환경부품소재'(광기반 융합육성사업·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사업),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산업·해상풍력산업) 부문 책임자 4명 등 2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선도산업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현재 지원단장을 공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와 전남도, 전북도 담당자들이 지난 21일 지원단 사무소 소재지 선정 현안을 협의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광주와 전남도가 지원단 사무실을 광주에 두자고 한 반면, 전

북도가 전주로 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이는 지원단이 해당 지역에 상주할 경우 선도산업 추진과 관련,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결함에 따라 3개 단체는 지경부에 지원단 사무소 입지 선정을 맡기로 했다.

광주 관계자는 “지원단이 출범도 하기 전에 참여 단체들이 이견차를 보여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원단 사무소 위치는 당연히 호남권 거점도시인 광주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SolutionPartner

차별화된 소재로 고객의 성공을 돕는
솔루션 파트너-LG화학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소재를, 고객의 성공을 돕기 위하여
고객의 필요에 맞는 소재를, 고객의 성공을 돕기 위하여

LG Chem